

회 의 록

과 제 명	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				
간담회 주제	식용 콩 자급률 향상 방안을 위한 간담회				
회의 장소	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(동관) 412호 세미나실 11시~13시				
과제번호		과제책임자	이 철 호	회의일시	2013. 7. 2.
내부참석자명단	이철호, 신동화, 김용택, 이숙중, 이꽃임, 이민경, 김미경				
외부참석자명단 (※다수일 경우 별도첨부)	성명	김석동	소속	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	
	성명	문갑순	소속	인제대학교	
	성명	홍주식	소속	농수산식품유통공사	
	성명	백인열	소속	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	
	성명	위남량	소속	농협중앙회	
내 용	<p>○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숙중, 이꽃임 연구원의 국내 식용 콩 현황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후, 내·외부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.</p> <p>○ 주 논의 내용은, 식용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, 식용 콩 자급률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, 식용 콩 100% 자급이 필요한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.</p> <p>○ 아래는 주 논의내용을 발췌한 것임</p> <p>(김석동) 식용 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함을 역설. 식용 콩 생산을 위해서는 첫째, 단지화하여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둘째, 불경농협과 같이 콩 재배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을 만들고 셋째, 정부가 콩 가격을 4,500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경우 50% 자급률이 가능할 것으로 봄.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.</p> <p>(홍주식) 02~07년까지 적용되었던 수매제도의 폐지 이유는 콩의 수매가 되지 않아 폐지한 것이며, 정부에서 수매해서 팔 때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는 국민세금으로 보충됨. 또한 수매가 되더라도 좋은 품질의 콩은 수매가격보다 좋은 가격에 시중에 다 팔리고 저 품질 콩만이 수매되는 어려움이 있었음. 또한, 수매가를 한 번 높이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매제도가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 됨.</p> <p>(이철호) 국내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가 보장되어야 자급률 또한 증진시킬</p>				

	<p>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 필요.</p> <p>(위남량) 국산 콩의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, 국산 콩 수요대책이 필요하며 국산 콩을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. 둘째, 정부가 2014년부터는 공공비축 수매(현시가로 매입 매출)를 시범적으로 5,000톤을 하는데 이 때 4,500~5,000원 정도의 안정적인 공공비축가격을 제시하면 좋을 것(현재는 시중가가 5000-6000원선인데 3800원 선으로 수매하고 있음). 셋째, 농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콩 생산을 단지화 하고 전국 거점별로 SPC를 설치하여 바로 SPC로 연결되도록 한다. 이를 위해 정부가 한 곳 당 30억 정도 지원이 필요(현재 RPC는 50억 정도 지원 중) 넷째, 기계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농가에는 씨 뿌리고 재배만해서 농협 콤바인으로 수확하여 SPC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한다.</p> <p>(이철호) 사실 우리나라 콩 품종(가지형)은 미국과 같이 기계화로 수확하기가 어려우며, 미국의 콩과 같은 키 큰 수형을 가진 품종개발이 필요하다고 봄</p> <p>(김석동) 우리나라의 경우 수확 시 10~15% 정도의 손실률이 있으므로, 이러한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, 일본의 경우는 전용 콤바인을 개발하여 콩 손실을 줄이고 있음.</p> <p>(문갑순)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, 파종여건을 만들어야 함. 한국콩연구회에서 불정농협으로 현장답사를 갔으며 불정농협에서는 농민들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음. 즉, 농민들은 파종만 하고 나머지는 농협의 지원으로 재배 및 수확이 수월하도록 돕고 있었음. 젊은이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.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인력을 뽑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.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한 국가적 철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.</p> <p>(백인열) 자급률 증진을 위해서는 종자산업에도 더 집중해야 함. 공공비축제도도 종자보관 및 전쟁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농가의 기계화도 필요함. 정부는 콩 자급률을 50%에서 45%로 목표치를 내렸으며, 식용 콩 100% 완전 자급을 위해서는 40만 톤 생산이 필요한데, 그에 따른 재배면적은 20만 ha가 필요하다. 현재 콩 재배면적이 7~8만 ha임을 감안할 때 재배면적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100% 자급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.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화와 단지화는 필수적이며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작물을 위한 관수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비로 인한 손실률을 줄여 수량이 증가할 수 있음(2017년 단수 목표치 100kg/10a)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끝 -----</p>
--	--